



동물복지정책

간담회



일시 2012년 11월 7일(수) 15시 ~ 16시 30분

장소 담쟁이카페 (문재인 대선 후보 시민캠프 내)

주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

주관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권 정책 연대(가)

간담회 순서

15:00	개 회 (사회 : 이기순 한국동물복지협회 정책기획국장)
인사말 15:00 ~ 15:10	임순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조희경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김정숙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인
주제 발표 I 15:10 ~ 15:40	1. 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 발표자 : 서지화(변호사,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2. 반려동물 판매업과 번식업 관리강화,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발표자 : 오순애(이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3. 야생 동물 보호와 전시 동물의 복지 발표자 : 이항(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15:40 ~ 15:45	휴식
주제 발표 II 15:45 ~ 16:15	4. 고래 포획 금지 발표자 : 장하나(국회의원, 민주통합당) 5. 사육곰 폐지 발표자 : 윤상훈(팀장, 녹색연합) 6. 자연재해, 환경재난 등 국가재난 시 피해 동물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발표자 : 이형주(팀장, 한국동물복지협회)
총평 16:15 ~ 16:30	김정숙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인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승국 시민캠프 공동대표
16:30	폐회

자료집 순서

1. 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 / 7
 2. 반려동물 판매업과 번식업 관리 강화,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 11
 3. 야생 동물 보호와 전시 동물의 복지 / 15
 4. 고래, 꼭 잡아야 하는가? / 19
 5. 30년 곰 사육 역사를 청산하자 / 21
 6. 자연재해, 동물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 시 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 / 25
- [별첨] ‘인간과 동물이 함께 하는 생명권 정책 연대(가)’가 제안하는 동물복지정책 / 29

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

서지화(변호사,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1. 생명권 : 인간만의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다

인간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인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비인간인 생명들을 인간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용과 소유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진정 다른 것일까. 식탁 위에 음식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라고 해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생명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닌 타인,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인권 감수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와 다른 생명체,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생명으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물권,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 대 인간의 정의를 확장시킴으로써 인간 중심의 이기적 정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므로 인간과 같은 생명체인 동물의 생명도 존중 받고 보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그들의 생명의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퍼져나감에 따라 보편적 인권사상이 동물에게도 확장돼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세계 각국은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나 논의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며 법률적으로도 동물을 이용의 대상, 물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간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며 법적으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함은 자명하다.

2. 생명권 보장을 위한 법률차원의 논의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이용이나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동물 보호, 동물복지보장에 아주 소극적인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간중심적이고 산업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정하고, 동물을 물건이자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헌법 차원의 논의

우선 헌법에서 동물을 “생명을 가진 동료”로써 존중할 것을 선언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담고 있는 국가 최고규범이므로 헌법상의 선언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2002년에 동물을 보호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법률의 수준을 넘어 헌법에 명시했고, 스위스 헌법도 “연방은 동물의 보호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한다”고 해서 동물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나아가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를 명시하고 자연이 파괴됐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해서 우리 헌법에서도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야 할 것이다.

- 민법 차원의 논의

우리 민법은 인간과 물건이라는 2가지 분류 아래 동물을 물건으로, 재산권의 객체로만 보고 있다. 그러나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오스트리아, 독일의 민법은 20여 년 전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주체인 사람, 생명이 있는 동물, 권리의 객체인 생명 없는 물건의 3가지 분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환가치가 아닌 실제 치료비를 배상하게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동물의 소유자가 그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물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도 오스트리아·독일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스위스 채무법의 경우에는 동물이 상해 또는 살해를 당한 경우에 동물보유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민법도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동물이 죽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동물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의무를 가하는 조항의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동물보호법 차원의 논의

동물보호법조차도 그 입법목적은 보면 기본적으로 동물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한계가 있고 세부적인 규정들도 문제점이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동물보호법 제8조의 학대금지규정은 학대의 개념이 불명확해서 법 적용과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 제10조에서는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법인 동물보호법만큼은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을 삶의 주체로 인정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입법목적에 맞게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이 정비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둬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려동물 판매업과 번식업 관리 강화,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오순애(이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반려동물이란 그야말로 인간과 일생을 함께하는 ‘반려자’ 즉, 동물이 생을 다 할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이며 그 수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도견, 치료견, 인명구조견 등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무한한 가치와 기여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대우가 바로 우리 사회 반려동물 문화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희로애락을 느끼는 감정과 지각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의 보호와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특히 산업제도 안에서의 반려동물은 소모품으로 전락해서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복지 즉, 생산과 판매업 규제 강화, 유기동물 증가와 안락사 방지를 위한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등의 장치가 시급합니다.

1. 반려동물 번식업, 판매업 규제

현재 구체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반려동물 번식, 판매업은 동물 보호의 대표적인 사각지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외에서는 강아지 공장(Puppy Mill)이라고 알려져 있는 개농장은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개를 번식하는 곳입니다.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번식을 행하므로 선천적, 유전적 결함을 가진 개들이 계속 태어나며, 각종 질환, 병적 두려움, 다른 개들이나 인간과의 사회화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암컷들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더 이상 번식이 불가능한 암컷과 판매 불가능 판정을 받은 강아지들은 도태됩니다.

번식, 판매업은 신고, 등록제를 통하고 있는데 기준이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농장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무분별한 번식행위로 동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번식장의 동물들은 유기될 확률도 높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유기동물 정책은 번식, 판매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높이고 ‘허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판매와 관련해서 티킵 강아지 판매, 대형 마트에서의 동물 판매, 희귀 동물 판매,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또는 금지가 필요합니다.

티킵 강아지는 소형견의 반복적인 교배와 제왕절개를 통해 작고 약하게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티킵 강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강아지의 젖을 강제로 떼곤 합니다. 어미는 새끼와 떨어진 채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고, 위험한 제왕절개를 4-5 차례 반복하면 대부분 목숨을 잃습니다.

국내 대형 마트 3 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체 330 개 매장 가운데 동물을 판매하는 곳은 291 개입니다. 판매동물은 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거북이, 관상어 등 30-50 여 종인데, 젖을 일찍 떼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어린 동물들이 대형 마트로 유통됩니다. 마트에서는 동물들이 행인들과 빛에 24 시간 노출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파충류, 조류, 설치류, 곤충류 등 희귀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적절한 관리감독과 제도 미비로 밀수와 부적절한 번식, 판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종인 희귀 애완동물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유통 과정에서 죽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판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반려동물의 판매는 생명경시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반려동물 소비를 조장합니다.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부적절한 시설에서의 번식, 사육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동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실효성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2010 년 통계에 따르면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수는 500 만에 달하며, 연간 10 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 전국 400 여 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40% 이상이 병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표준 가이드라인과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며, 야간 공휴일

의 구조와 진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도 없는데, 질병 관리의 경우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에 급급한 상황이며 심지어 보호소가 자체 전염원이 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표준화된 운영을 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구비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성 좋은 곳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동물보호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탁보호소의 불투명하고 파행적인 운영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과 관리 소홀은 물론, 관리 동물을 육용으로 유통하는 등 동물보호소가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입찰제로 가장 적은 예산이 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보호소의 운영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나 일반 시민 등 민간의 참여보장을 통해 이러한 파행적인 운영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포함한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은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사후 대처는 물론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하는, 명실상부한 동물보호의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생 동물 보호와 전시 동물의 복지

이항(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야생동물의 보호와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미래가, 그리고 문화와 역사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시되는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수족관(아쿠아리엄)의 전시동물, 돌고래쇼, 원숭이쇼와 같은 동물쇼에서 연기를 하는 동물,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동원되는 동물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은 이렇게 인간 가까이 있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야생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동물들도 포함된다.

1. 동물원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시설이며, 개인의 동물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현대인들이 생애 처음 야생동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동물원에서이다. 어릴 때 동물원에서 경험하는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사람이 평생 동안 가지게 될 야생동물 또는 동물 전반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생애 처음으로 마주친 야생동물이 비좁고 더러운 창살 속 감옥 같은 우리에 하릴없이 무표정하게 누워 있는 동물들이라면,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인간의 명령에 따라 인간 흥내를 내는 흥미거리로만 보여진다면,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부정적이 될 확률이 높다. 반면 자연스러운 환경에 활기찬 동물들로 야생동물을 접하게 된다면 동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동물원이 야생동물 또는 동물에 대해 사회 전반이 가지는 인식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이 동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인간-동물 관계, 그리고 동물의 운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우리 사회에 동물원과 같은 야생동물 전시시설이 필요하다면, 이런 곳에 전시되는 야생동물들이 적절한 환경과 복지 상태에서 전시되도록 노력하고 제도를 갖추는 일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전반적 노력의 일환이 돼야 할 것이다.

2. 동물의 존엄성을 해치고 야생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시키는 형태로 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간접적 위협을 주게 된다

돌고래쇼를 비롯해서 야생동물을 이용하는 동물쇼는, 야생동물을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가진 생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흥미거리인 하나의 장난감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복돋우는 결과를 낳는다. 동물쇼를 본 사람들 중 일부는 특이하고 귀여운 행동을 하는 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밀수입이 성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야생에서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들의 멸종을 가속화 시킴과 동시에 구제역, AI, 사스 등 무서운 동물 질병과 인수공통질환을 옮기는 매개체를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면, 아마도 그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멸종 당하지 않을 권리”가 아닐까

가장 심각한 동물학대는 아예 그 동물 종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더 큰 학대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우리 인류는 지난 수 백 년 간 많은 동물들의 씨를 말려왔고 지금도 학살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멸종된 동물 중 대표적 동물인 호랑이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호랑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호랑이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호환 염려 없이 등산도 마음껏 다닐 수 있으니 호랑이가 멸종된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송례문이 소실됐을 때 우리 모두 진심으로 애통해 했다. 송례문이 있든 없든 우리의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는 송례문을 하루빨리, 비용에 관계없이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송례문이 우리 민족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 보자면 송례문보다 호랑이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야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한다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호랑이 이야기, 속담, 전설, 신화 뿐 아니라 호랑이 그림, 민화, 석상,

조형물에 둘러싸여 자라고, 살고, 죽어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호랑이의 멸종은 숭례문 소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문화적으로 중요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야생동물 보호, 보전 문제를 단순한 동물복지 또는 생물학적, 생태적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관계와 문화·역사 관점으로도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

고래, 꼭 잡아야 하는가?

장하나(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정부는 지난 7월 4일 제 64차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참석해 내년 5~6월에 열릴 과학위원회에 ‘과학연구용 포경(Scientific Whaling)’에 대한 재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후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의 화살을 맞게 됐다. 호주 줄리아 길라드 총리의 “한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는 발언에 이어, 뉴질랜드 존 키 총리도 “최악의 한 발자국”이라며 한국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미 국무부 패트릭 벤트렐 대변인은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포경반대 입장 명확히 했다. 포경 문제가 국제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IWC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회원국으로 해양포유류인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1년 “고래자원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전시·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허용했다.

돌고래쇼를 비롯한 모든 고래의 사육과 전시는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돌고래를 산 채로 포획하는 과정에서 그 치사율은 6배가 상승하며 포획 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은 30일 이상 지속된다.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은 고래류를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사육과정에서 고래는 인위적 훈련, 격리, 자연과는 다른 환경 때문에 더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영국에서는 1993년 수족관 자체가 사라졌고,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수족관에 해양포유류를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아예 없앴다. 칠레도 2005년 전시용 고래포획을 금지했고 지난 3월 스위스에서도 고래류의 사육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정부는 고래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때문에 과학포경을 재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본 의원이 지난 7 월 19 일 개최한 고래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실제로 고래 개체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고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래가 먹는 어족자원은 연간 14 만 6,000 톤으로 추정 되는데, 이는 2011 년 연근해어업 어획량(123 만 톤)의 약 12%를 차지함” 이라는 농식품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는 단지 어업인들에게 들은 추정치 일 뿐 고래가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고래의 개체 수는 아직 포경을 허용할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정부가 타 기트로 하는 밍크고래의 경우 미국해양포유류연구소(National Marine Mammal Laboratory)는 현재처럼 한 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150 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포 획, 혼획될 경우 2050 년까지는 멸종근접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비살상, 비포획 방식으로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한 해 혼획되는 100 여 마리 고래를 통한 해부학적 연구도 가능하다. 국제포경위원회에 참석한 호주대표단은 우리정부 측 대표단에게 비살상 방식의 고래조사 방법을 전 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우리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고래를 포획, 감금하고 인위적 훈련을 시켜 쇼에 동원하는 것은 ‘교육’이 아 닌 ‘폭력’이다. 인위적으로 감금된 모습이 자연생태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고 래의 전시와 쇼는 고래에 대한 왜곡되고 인위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이다.

농식품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국격을 격하시키는 과학포경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고래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에 고래보호문제를 이관해 야 할 때다.

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CITES 종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자는 것 은 종의 보호뿐 아니라 먼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 임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

30년 곰 사육 역사를 청산하자

윤상훈(팀장, 녹색연합)

1. 배경

. 1981 년 당시 농림부는 재수출용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500 여 마리의 곰을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함.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85 년 곰의 수입, 수출을 중단했고 곰은 애물단지로 전락함.

. 원래의 용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정부(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는 농가들의 계속된 민원으로 1999 년에 25 살 이상 된 사육곰은 도축해서 웅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이후 2005 년도에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사육곰 관리지침을 작성했고 도축 연한을 25 년에서 10 년으로 낮춰 지금에 이르게 됨. 2012 년 현재, 전국 54 개 농가에서 1,000 마리의 곰이 철창 속에서 사육되고 있음.

2. 곰 사육 정책의 문제점

1) 여전히 계속되는 곰 농장의 사육곰 탈출

. 2012 년 7 월 경기도 용인의 곰 사육 농가에서 아시아산 흑곰 두 마리가 탈출, 사살됨. 2011 년 1 월에는 충북 청양에서 4 년생 수컷 한 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해 사살됐고, 4 월에는 2 년생 곰 한 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해 등산객을 문 적이 있으며, 11 월에는 화성 동탄에서 사육곰이 출몰해 포획된 사례 등 매년 사육장의 곰 탈출 사건이 발생함.

. 정부가 관련 당사자와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이끌지 못한다면 매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임.

2) 정부가 조장한 ‘곰 사육 정책’

. 현재의 사육곰 문제는 정부의 곰 사육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야기된 것. 이는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2010, 민주통합당 홍희덕 의원) 검토보고서』의 환

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인정한 것이며, 정부는 곰 사육 장려를 위한 국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함.

. 따라서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증식 금지 합의와 보상, 사육곰의 국가 매입, 향후 관리계획 수립 등 과제는 국가가 직접 풀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음.

3) 복원용 ‘귀한 곰’과 응답채취용 사육곰

.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생에 적응 중인 27 마리의 반달가슴곰에게 추적장치를 붙인 뒤 먹이찾기, 짝짓기, 출산 과정을 관찰하는 등 복원사업에 몰두하고 있음. 복원사업 초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육곰 농장으로부터 한국산 토종곰인 ‘우수리종’을 분양 받기도 함.

. 그러나 전국 54 개 사육장의 1,000 마리의 곰은 10 살이 되면 도축돼 응답을 수거하기 위해 열악한 조건의 사육장에서 길러지고 있음. 응답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곰은 중국과 한국뿐임.

4) 국내외 비난 여론

. 한국의 곰 사육 정책은 세계야생동물협회, 아시아동물재단, 세계자연보전연맹 곰 전문가 그룹 등 국제동물보호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 2012 년 9 월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응답용 곰 사육 폐지’ 발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되기도 함.

. 한국 국민들의 89.5%는 응답 채취 목적의 곰 사육에 반대하고, 국내 한의사들의 93.1%는 응답을 처방한 적이 없으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본초학회는 응답을 대체한 약제가 충분하다고 밝힘. 곰 사육 농가의 80%는 정부에서 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곰 사육의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고 있음.

3.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활동 경과

1)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2010 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사육곰의 증식금지 조치, 사육곰 매입·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 환노위 공청회까지 거쳤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통과되지 못함.

2)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

. 2012 년 4 월, 환경부는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충남대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검토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된 상황임.

3)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곰 사육협회의 증식금지 합의와 보상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곰 사육 증식금지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4.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제안

1) 증식 금지 합의

. 정부와 사육곰 농가의 증식 금지 합의는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선결 조건임. 사육장의 곰이 더 이상 웅담 채취 목적으로 증식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며 향후 정부가 매입한 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한 ‘민관 협의체’를 제안함.

2)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육곰 증식금지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육곰 폐지 정책 전반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녹색연합은 국내 사육곰의 증식금지 사안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증식금지 조치는 향후 사육곰의 매입 및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에 환경부 추진내용과 다른 별도의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추진해야 함.

3) 2013 년 곰 사육 정책 폐지 예산 확보

. 증식금지 보상, 사육곰 매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2013 년 예산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함. 사육곰협회, 환경/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2010 년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증식금지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를 이끌어 왔음.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

자연재해, 동물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 시 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

이형주(팀장, 한국동물복지협회)

1. 배경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무분별한 환경 개발, 원전 건설, 각종 산업의 대형화 등은 우리 사회가 자연적, 인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강도를 나날이 증가시키고 있다. 여름마다 홍역처럼 치러야 했던 수해, 대형 화재, 급속하게 퍼지는 동물 전염병 발생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동물의 생명은 경제적 손해 가치의 척도, 혹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간주될 뿐, 생명으로써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도적 처우조차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시 동반되는 동물의 방치, 부상, 질병 감염, 집단 폐사 등은 이미 생명 존중 의식이 성장한 국민들의 정서에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동물 전염병 등 2 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적, 인적 재해 발생 시 동물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입은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재난 사고 사례

1) 2011 년 구제역

2010 년 1 월부터 2011 년 3 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은 농장/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집계 자료에 의하면 총 사육두수의 33.3%의 돼지, 3.4%의 육우, 8.4%의 젖소 등 총 345 만 마리의 농장동물을 살처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살처분과 방역 과정에서 공무원 9 명이 사망했고 150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구제역 양성 판정에 비관한 농민 자살 사건까지 일어났다. 경제적으로는 2 조 5000 억이라는 사상초유의 피해를 초래했다. 생산유발 감소 4 조 93 억 원, 부가가치 감소 9,550 억 원, 고용 감소 효과는 4 만 8,813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이런 비극을 가져온 구제역 사태는 총체적인 정책의 실패였다. 구제역이 성체동물에서는 감염 사망률이 5%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2 주 안에 항체가 생긴다는 점에 근거한 살처분에 대한 당위성 논란, 매립지의 환경오염 우려, 생매장에 대한 반대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을 강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구제역 비발생국의 명예에 대한 집착이다. 다양한 산업 활동, 지리적 환경, 야생동물, 인구 이동 특성, 축산업 구조 등 다양한 구제역 유입과 전파 경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규정하고 수출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백신 정책을 포기하고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즉, 구제역 사태는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국격’이라는 명예 문제로 인식하고, 생명보다 국가의 명예나 경제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낳은 비극이다.

2) 2012 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2 년 9 월 27 일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는 사고가 난 지 1 주일이 지난 후에야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정부의 허술한 초동 대처와 안일한 대응으로 국가의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증폭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고가 터진 지 한 달 만인 10 월 23 일에서야 환경부는 농작물과 가축, 토양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불산에 노출된 것으로 신고된 3,997 마리 농장 동물에 대해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식품 원료로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축산물위생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동물의 오염도나 유해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단지 피해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4 천 마리 동물을 일괄 “폐기처분” 한다는 정책은 불합리하며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의 생명 경시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주 언론들도 정부의 일괄 폐기 방침과 대형 사고 때마다 드러나는 행정적 과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3. 정책 제언

1) 증산 중심 정책에서 지속적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 전환

증산 중심 지향의 축산으로 인해 밀집사육이 이루어지며, 열악한 환경에서의 밀집 사육은 동물들의 면역력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우리나라 농장동물들은 비인도적인 살처분 위험뿐 아니라 교배, 사육, 운송, 도살과정에서 국제동물기구(OIE)가 권장

하는 지침과는 거리가 먼 생존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밀집사육을 소규모 친환경사육으로 전환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장동물에게 생명으로서의 배려를 하기 위해 단계적인 절차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

2)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대응 기구 마련

구제역과 같은 1 종 법정 전염병의 경우, 정책 결정의 모든 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으며, 질병 판정 기능 역시 정부 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수의학 전문가와 축산인 대표를 포함한 십여 명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통해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즉, 소수 전문가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면, 곧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결정에 따라 명령을 수행해야 하고, 전 국민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중앙정부에 집중된 시스템은 일방향적인 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 정책 기획 기관, 동물질병 연구 기관, 위험 예측-관리 연구기관, 대국민 정보전달 기관 등의 기능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재난 대응에 대한 정책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 방역기관, 의사 등 다양한 위험관리 주체들의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현장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홍수, 태풍 등 주민들의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피해지역 내 동물의 고립, 방치를 최소화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생명의 처리 문제는 상업적 손실 여부에 앞서 생명 윤리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재난 시 피해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경제 지상주의와 생명경시 사상이 제도적으로 바로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제 2, 제 3 의 구제역이 터질 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실패한 축산정책과 사고 대응 정책을 거울 삼아 같은 비극을 두 번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도적 도살의 내용이 전무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정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복지축산’의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별첨]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동물복지정책 3대 방향 9대 과제

2012. 11.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권 정책 연대(가)

우리 시대, 동물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존중 받지 못하고 착취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또한 동물복지는 동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이 되고, 환경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서 미래를 약속하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하는 생명권 정책 연대(가)’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채택하고 추진해야 할 동물복지정책 3대 방향과 9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3대 방향

방향 1.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

. 동물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서의 권리를 지님. 생명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 생명 경시 풍조는 자살, 정신질환, 사회적 지지대의 실종 등의 현상을 야기함.

방향 2. 공감과 책임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 인간 또한 생태계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동물에 대한 윤리적, 생물학적 배려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교육, 출판, 문화 진흥사업 추진.

방향 3. 동물복지종합정책 수립 및 추진 기구 마련

. 국민들의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성장한 것에 비해 동물보호법이나 관할 부처, 관련 정책은 미비한 상황임. 인간, 동물, 자연에게 위협이 되는 반생명적 동물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시급.

9대 과제

1.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동물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각기 달라 생기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동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을 위해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함.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함으로써 동물 관련 정책 수행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자문기구의 역할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기구가 돼야 함.

- 제안 정책 1. 동물보호 담당부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환경부 혹은 보건복지부로 이관
- 제안 정책 2.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
- 제안 정책 3. 야생 동물과 공존하는 국토의 활용 방안 마련
- 제안 정책 4. 집단 질병과 환경 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동물 재난 대응책 마련

2. 동물보호법의 지속적인 강화와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제도 구축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규제와 보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보호를 총괄 전담할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이 없어 동물학대 사건 등과 같이 위중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동물학대는 범죄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함.

- 제안 정책 1.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학대자의 피학대 동물 소유권 제한
- 제안 정책 2. 동물보호 전담 부서 및 담당 경찰관을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에 신설/배치하고 담당자 교육 의무화
- 제안 정책 3.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 제도의 감시, 시정, 사법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정비와 복지 개선

반려동물산업이 확대되고 생명을 팔고 사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생명을 경외와 신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대상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됨. 살아 있는 생명의 상품화는 지양돼야 함. 이와 함께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와 인간을 위해 노동하는 사역동물 등 반려동물 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물의 복지에 대한 고려 필요.

- 제안 정책 1. 동물판매자의 자격 요건 및 판매 시설 요건 강화
- 제안 정책 2. 반려동물 번식업을 허가제로 전환
- 제안 정책 3. 유기동물보호특별법 제정으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 운영과 재정 지원 법제화
- 제안 정책 4. 식용 목적의 개농장에 대한 업종 전환 유도 및 그에 대한 지원
- 제안 정책 5. 인간을 위해 노동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처우 개선과 퇴역 후 거취 보장

4.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 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생매장되고, 같은 시기 조류독감으로 650만 마리가 매몰되면서 동물복지와 환경오염은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는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이후 정부는 축산업 위기 탈출 방안으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지원이 대규모 축산농가에 집중되면서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여부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 동물복지형 소축산으로의 전환 장려 및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수요 창출 방안 마련 필요.

- 제안 정책 1. 배터리 케이지, 스톨·뜯장 사육 단계적 금지
- 제안 정책 2. 동물의 인도적인 운송과 도살, 안락사 기준 준수 의무화
- 제안 정책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기준의 강화 및 인증 심사 결과의 완전 공개 의무화
- 제안 정책 4. 육류 소비는 동물복지형 축산물로 대체하고 곡채류 섭취는 늘리는 건강보건정책 추진

5. 화장품 동물실험의 단계적 금지

전세계적으로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동물실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화장품의 생산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각 국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실험법의 개발 등 각종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동물실험과 그 유통까지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손쉽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없는 실정.

- 제안 정책 1. 동물보호법에 화장품, 생활용품 생산,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 금지 조항 신설
- 제안 정책 2. 대체실험법 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 활성화
- 제안 정책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동물실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6. 고래 포획 금지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으로 고래류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획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간주해서 혼획된 고래의 유통을 간소화하고, 전시와 공연을 위한 포획을 허가함으로써 상업 포획을 부추김.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법포경과 혼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제안 정책 1. 과학포경 재개 계획 중단
- 제안 정책 2. 현행 농림수산부 고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2010-246호)’ 제 4조 2의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 항 삭제
- 제안 정책 3. 혼획을 줄이고 고래류의 개체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수립

7. 곰 사육 폐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된 곰 사육은 2005년 10년생 곰의 도축과 웅담 채취가 허가되면서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 및 웅담 착취, 웅담의 불법 채취,

부산물의 불법 유통, 관리 부실로 인한 동물의 탈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끊임 없이 낳고 있음. 여론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을 반대 하고 있으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곰 사육 폐지 결의문이 통과됨.

- 제안 정책 1. 사육곰 불임 수술 선행
- 제안 정책 2. 불법적인 곰 상품화에 대한 단속
- 제안 정책 3. 곰 사육 폐지 후 현존 사육곰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8. 전시, 오락 동물의 복지

서식지에서의 연구와 야생 개체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과거 동물원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교육적 기능과 종 보존의 기능도 축소 평가되고 있음. 동물 체험전 등 전시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는 동물 학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전시 시설 내에서 번식된 야생동물은 영세 동물 전시 업체에 거래되면서 종별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사육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제안 정책 1. 전시동물보호법 제정
- 제안 정책 2. 동물 전시 시설에 대한 허가 조항 강화
- 제안 정책 3. 전시동물의 소유, 양도, 판매, 폐사 기록 공개 의무화
- 제안 정책 4.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오락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산업의 폐지

9. 동물보호 교육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동물보호 교육은 환경 교육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성 교육 중 하나임. 동물보호 교육은 동물이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도록 교육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복지를 향상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임.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생활은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돌보게 해주며 그를 통해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더욱 성숙하게 함.

- 제안 정책 1.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 교육 포함
- 제안 정책 2. 초, 중, 고등학교의 생체 해부 실험 금지
- 제안 정책 3. 대학 동물관련학과 과정에 동물복지교육 의무화